

# 금융 위험 피하겠다고... 소극적인 보증기관 'IP 과소평가'

(지식재산)

기술보증기금에서 시행하는 지식재산(IP) 가치 평가가 '선수 심판론'이 제기됐다.

보증 기관이 가치평가에 나서 IP활성화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다. 정부에서는 가치평가 표준 시스템을 확립해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IP 담보대출 등 기술을 보증하는 기술보증기금이 금융 위험을 회피하고자 IP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지 못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IP거래 전문업체 대표는 "보증 금액을 최대한 보전하려 시장 가격보다 낮은 가치로 IP를 평가하고 있다"며 "기관 안전을 위해 당연한 선택이지만 IP

'기관 안전·보증 금액 보전' 우선 기보, 시장보다 낮은 가치로 평가

IP 금융 활성화 '선수심판론' 고개 지제위, 독자적 평가 틀 개발 추진

금융 활성화에는 방해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시장 가격은 10억원 정도로 평가 받을 수 있는 기술도 보증기관의 안전성 보장을 위해 1억

원 정도로 가치 등급을 매길 수 있다는 이야기다.

기술보증기금은 발명진흥회·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 등과 함께 IP 가치를 평가하는 주요 공공기관이다. 금융권에서 기술을 담보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IP에 'AAA' 'BBB' 형태로 등급을 평가한다.

2010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특허 기술평가 건수 5만2638건 가운데 기술보증기금이 수행한 기술평가 건수는 3만9968건으로 75% 이상을 차지한다. IP 가치평가와 금융관계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기관은 기술보증기금과 산업은행뿐이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 관계자는 "금융 위험 때문에 IP 가치가 과소평가되거나 외부 영향으로 과대

평가될 수도 있다"며 "가치 평가 때 기관 입장이 빠질 수 없기 때문에 선수 심판론이 제기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업계 관계자는 "기술보증기금이 보증 기능을 계속 수행하기 위해서 IP 가치평가 부분은 2차 검증 정도로 축소할 필요가 있다"며 "공공기관에서 IP 가치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면 시장 가격이 흔들린다"고 말했다.

기술보증기금 관계자는 "보증은 금융 문제기 때문에 위험을 안고 갈 수밖에 없다"며 "제3자가 가치 평가를 해 대출을 하게 되면 기술 평가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보수적으로 기보 선수심판론 의견이 있을 수 있

지만 책임을 가지고 가치평가를 하지 않으면 기술보유자 요구안이 그대로 수용되는 사례가 많다는 설명이다.

지제위 관계자는 한 기관에서 독자적으로 IP 가치평가 결과를 책임지지 않도록 가치평가를 시스템화하는 작업을 추진 중이다.

평가 정보를 축적해 검증 가능한 IP 가치평가 틀을 개발하는 것이다.

기술보증기금 관계자는 "가치평가하는 개인 한사람, 한 기관만 바뀐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며 "신뢰성 있는 정보를 토대로 가치 평가 방법론을 새롭게 수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동준기자 djkwon@etnews.com

## “생생한 IP 거래현장서富力 부르는 경쟁력 배울 것”

내달 3일 개강하는 김흥기 중국과학원 지식재산최고위과정 원장

다음 달 3일 좀 특별한 지식재산(IP)최고위 과정이 개강한다. '중국과학원 지식재산최고위과정(CAS)'이 그것이다.

KAIST·서울대 등 주요 대학이 개설한 IP전문 과정은 많지만 이번에 열리는 교육은 출발부터 다르다. 중국과학원과 연계한 한중 공동 IP전문 특성 과정이다.

중국과학원은 1949년 11월 북경에 설립한 중국 최고 학술기관으로 산하에 11개 분소와 84개 부속 기관, 1개 대학교를 두고 있다. 한국과 중국을 아우르는 전문 IP과정이 만들어진 것이다.

김흥기 중국과학원 지식재산최고위과정 원장(52)은 "IP 강국으로 부상한 중국과 한국의 지식재산 정보를 공유하고 비교해 인사이트를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고위 과정은 9월 3일부터 12월 3일까지 4개월 동안 IP경영의 실패와 성공 사례, 중국진출 투자 관련법, 창조경제와 IP이코노미 등 20여개가 넘는 주제로 진행된다. 중국과학원 교수진과 정부 관련관에게 직접 듣고 지식재산 현장을 둘러보는 현지 답사도 예정돼 있다.

연사 면면도 화려하다. 백만기 지식재산서비스협회장, 유진통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정길성 한국과학기술한림원장, 윤동열 대한변리사회장, 한정화 중소기업청장 등이 강연한다. 수료 후에는 중국과학원 명의로 수료증을 수여한다.

김 원장이 과정을 개설한 배경은 'IP가 경쟁력'이라는 신념 때문이다.

김 원장은 "삼성과 애플 특허 전쟁으로 IP 중요성이 높아졌지만 아직도 개인, 심지어 기업조차도 피상적으로 IP를 이해하고 있다"고 전제한 뒤 "진짜 IP시대는 이제 시작"이라며 "기업과 개인 모두가 부를 얻는 중요한 수단일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韓·中 아우르는 20여 전문과정 교육  
日 포함 아시아 대표과정 격상 포부

김 원장은 앞으로 IP를 모르면 아웃사이더로 전락한다고 단언했다.

"지식경제 시대에 돈을 버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지식을 재산화해야 합니다. 부는 지식에서 나옵니다. 특허·상표·디자인·영업 비밀 등을 포함한 아이디어를 재산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지식을 활용한 거래입니다. 지식은 유통될수록 더욱 가치가 높아집니다. 움켜쥐기보다는 가치 있는 방향으로 거래가 이뤄지면 자연스럽게 부가 따라옵니다."

김 원장의 주장은 반말이 아니다. 그는 이를 스스로 입증했다.

행사 합격 후 특허청으로 공무원 생활을 시작해 10년 공직생활을 끝내고 사회에 나와 10년 만에 성공 문턱까지 올라갔다. 공무원이 사회에 나가면 1년

만에 족박을 잔다는 통념을 보기 좋게 허물었다. 모두 IP와 이를 이용한 거래를 제대로 활용했기 때문이다.

2001년 16여㎡(5평)로 시작한 사업체는 지금 경기도 성남에 있는 18층 빌딩으로 규모가 성장했다. 명함 한 장에 경력이 빼곡할 정도로 사회적 신망도 쌓았다.

국내 첫 모스크바 국립대 초빙교수,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위원, 산업부와 보건복지부 정책자문위원, 대한민국과학기술 대연합 공동대표, 세계적인 지식재산 전문가협회 부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김 원장은 "올해 한중 공동으로 출발하지만 내년에는 일본까지 포함한 한중일 공동으로 확대해 아시아 지역 대표 IP 교육과정으로 격상 시키겠다"고 강조했다.

강병준기자

bjkang@etnews.com

사진=정동수기자

dschung@etnews.com



## ITC 결정에 거부권? 연방법원서 직접 손배 끌어내면 된다

글로벌 IP 현장 <1> 삼성·애플 특허분쟁에서 ITC가 주는 메시지

"세계 지식재산 전문가의 본질을 읽는다" 특허분쟁이 세계무대로 확산되면서 우리 기업이 진출한 주요 국가 IP 제도와 인프라, 분위기를 파악해야 하는 상황이다. 미국·중국·유럽·일본 등 주요 국가의 IP 생태계가 우리기업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 이에 전자신문은 '세계한인지식재산전문가협회(WIIPA)'와 함께 세계에 흩어져있는 IP 전문가의 지식과 정보를 한 곳에 모았다.

美 보호무역주의 확산 우려 커졌지만 '특허법률 시장 위축'으로 보긴 어려워



한윤석 변호사

지난 9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삼성전자의 일부 제품이 애플의 특허 두 건을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애플 특허를 침해한 삼성전자 제품의 수입·판매 금지를 결정했다.

삼성 특허를 애플이 침해한 것과 관련한 애플 제품의 수입·판매 금지조치에 오바마 행정부가 거부권(Veto)을 행사한 것은 미국 내에서도 논란이 많다. 25년 만에 대통령이 ITC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했다는 사실을 봐도 알 수 있듯 삼성과 애플의 ITC 특허분쟁이 미국 내 많은 기업의 특허침해소송 전략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ITC 특허전쟁이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 ITC는 특허침해소송을 다루는 연방법원이 아닌 대통령 직속의 준사법적 기구(quasi-judicial agency)다.

ITC에 특허침해를 제소하는 기업은 특허침해소송으로 사법부 판결을 얻어 특허분쟁을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다. ITC에 제소해 경쟁사의 제품을 시장에서 몰아내고자 하는 것이다. 기업이 법원 결정으로 얻는 것과 ITC 결정으로 얻을 수 있는 것에 분명한 차이가 있다.

기업이 연방 법원이 아닌 ITC에 제소해 얻는 이점은 두 가지다. 첫째는 ITC 결정이 연방법원보다

일각에서는 미국 보호무역주의로 미국이 특허법률 시장의 매력과 잃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제시된다. 그러나 이번 결정을 미국 특허법률 서비스 시장 위축과 단순히 연결시키는 것은 어렵다.

미국 언론이 밝힌 바와 같이 인텔과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기업은 사소한 특허침해 여부에 따라 제품의 수입과 판매가 제한되는 것에 우려를 나타냈다.

그러나 쿼럼과 같이 특허 라이선스 계약으로 수익을 내는 기업은 무역기구나 법원에서 경쟁사 제품의 특허 침해에 수입·판매금지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특허 가치가 계속 약화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ITC 소속 변호사였고 현재 네브라스카 법과대학에 재직중인 페퍼드 교수도 이번 오바마 행정부의 거부권 행사 결정에 특허 가치가 법원의 말, ITC의 말, 백악관의 말에 따라 매일 바뀌고 있다고 비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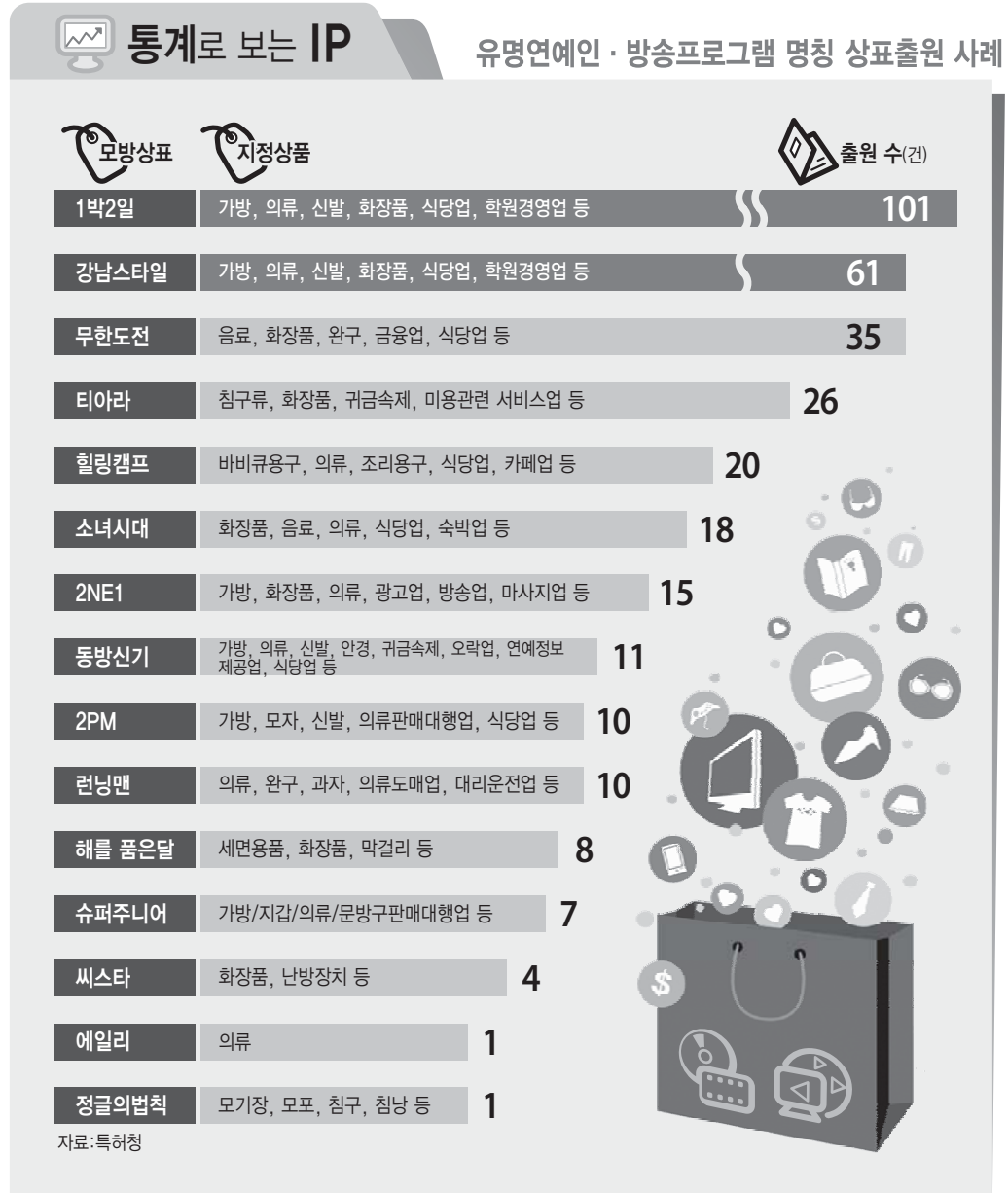
미국 내 여론을 의식한 탓인지 프로먼 대표 역시 ITC 권고에 거부권을 행사한 데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듯하다. 이번 결정 시 ITC로 보낸 공개서신에 "특허권 보유자는 법원을 이용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라는 문장이 포함되어 있다.

ITC 결정으로 미국이 특허소송 시장으로써 현재의 지위를 잃거나 기업 특허권 보호에 인색해질 것이라고는 여겨지지는 않는다. 미국 정부 결정을 특허권 오남용과 특허권 보호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는 정책기조의 일환으로 봐야 한다.

제품 일부분의 사소한 특허침해만 밝혀내면 그 제품 전체의 수입·판매금지 결정을 받아낼 수 있었던 여태껏 상대적으로 손쉬운 ITC를 이용한 전략보다는 연방법원 특허침해소송을 이용해 손해배상을 이끌어 내는 방향으로 특허권을 주장하라는 일종의 메시지로 읽을 수 있다.

미국 로하트만행엔버나(LHHB) 대표변호사

yham@pjfirm.com



특허청 '강원 지식재산 페스티벌' 막 올라 특허청은 27일 오후 춘천 호반체육관에서 강원 지식재산 페스티벌을 개최했다. 이강후 국회의원, 최문순 강원도지사, 김영민 특허청장, 박상수 강원도의회 의장(왼쪽부터)이 개막 행사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IP5, 동일한 특허 출원 땀 심사 조기화

<5개 지식재산 주요국>

내달 제네바 청장회의서 '특허심사 하이웨이' 합의할 듯

다음 달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5개 지식재산 주요국(IP5) 청장 회의'에서 특허 관련 심사를 조기화하는 '특허심사 하이웨이(PPH)' 합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다자 간 특허 출원비용 절감뿐만 아니라 관리와 기간도 단축된다. 우리나라는 주요 출원국인 유럽과 양자 간 PPH도 체결할 계획이다.

특허청은 "내달 23일 IP5 청장회의에서 우리나라·미국·중국·유럽·일본 등 IP5 국가가 서로 특허 심사를 빨리할 수 있는 PPH에 대한 잠정적 추진이 이뤄질 것"이라며 "10월 실무자 회의에서 PPH 방법을 구체화할 것"이라고 27일 밝혔다.

PPH는 해당 국가 특허청에서 특허 결정을 받은 출원인이 다른 나라 특허청에 동일한 출원을 할 때 우선 심사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다. IP5는 지난 6월 실무자 회의에서 PPH 필요성 인식을 같이 했다.

지난 달에는 일본 경제산업성과 특허청(JPO)이 "IP5 공동으로 기업 특허권을 조기화 취득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만들 것"이라고 발표했다.

2개국 사이에 특허 조기 취득 과정인 PPH를 5개국으로 확대 운용할 계획이란 설명이다.

새로운 PPH 적용은 IP5 내 한 국가에서 특허성이 있다고 판단된 출원을 다른 나라에서도 선행 국가의 특허성 판단 결과를 존중해 심사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다.

지식재산연구원은 "PPH 관련 내용은 스위스제네바에서 열리는 IP 청장 회의에서 합의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며 "IP5 특허 신청 절차나 제도 운용 요건 등을 통일화하는 방향으로 최종 조율될 것"으로 예상했다.

우리기업의 주요 해외 출원 지역인 유럽 국가와 양자 간 PPH 체결도 이뤄질 계획이다.

특허청 관계자는 "체결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국가를 발할 수는 없지만 유럽 주요 3개국과 PPH 체결 일정을 잡았다"며 "우리 기업이 신속히 해외 지식재산권을 확보해 해외 시장 판로 개척을 보호하고 안전한 경영을 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권동준기자 djkwon@etnews.com